尹 "인플레감축법 우려"…해리스 "해소방안 챙겨보겠다"

윤 대통령, 美 부통령 접견 "한미동맹, 경제기술 동맹 확대" "뉴욕 발언 전혀 개의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 통령을 접견했다.

현직 미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후 4년 6개월 만

85분 동안 이뤄진 접견에서는 한미 관계 강화 방 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 안보와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 졌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에서 "한미 동맹은 한 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군사 동맹에서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 조했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식 방한후 4개월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서울에 이렇게 오게 돼 큰 영 광"이라며 "남편이 지난 5월 (윤 대통령의) 취임식 에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 다"고 이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과 관련, "한 국 내 논란에 대해서 미국 측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깊은 신뢰를 갖고 있고,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고 언급했다.

이어진 비공개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 통령에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양국이 한미 FTA(자유무역 협정)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 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무력 정책 법제화에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양측은 확장 억제를 비롯해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한미 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 조치를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 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 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도 재확인했다.

유동성 공급장치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포함하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 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과 유동성 공급장치의 발 동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가동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미 연준 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진 해임건의안 국힘 집단 퇴장 속 국회 본회의 가결

찬성 168명·반대 1명·기권 1명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할 듯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단체 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해임건의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 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 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당 차원에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한 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 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임 건의로 인한 정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 한 해임 건의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독도인근 공해상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

북 SLBM 등 잠수함 대응 강화 5년만에…美항모·日구축함 참가

한국·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5년 만에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해군은 오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일 전력 과 함께 대잠전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 art

한미일은 2017년 4월 3일 북한의 SLBM(잠수 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제주 남방 한 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대잠전 훈련을 벌인 바 있다.

이번 훈련은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SLBM 능력 고도화 등 점증하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 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훈련

지역이 '독도 인근' 이라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북한 SLBM 위협과 잠수함의 주요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해 동해상 공해구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며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과 추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이번 대잠훈련에 한국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4천400t급)이 참가한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000t급)와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9800t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6900t급)·벤폴드함(DDG 65·6900t급) 등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이 나선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아사히함(DD 119·5100t급)이 참가한다. 아사히급 1번함인 아사히함 은 신형 준이지스급 구축함이다.

/연합뉴스

박진 "거취, 임명권자 뜻 따르겠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진 자신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 입장은 이미 말씀드 렸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신의 해임건의 안을 당론으로 채택·제출한 데 대해 "외교는 국익 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박 장관은 "지금 세계 모든 나라는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우리를 둘 러싼 국제 외교·안보 환경은 너무도 엄중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30일 이후의 박 장관 일정을 발 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장관이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 중남미외 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5일에는 알렉 산드라 힐 엘살바도르 외교장관과 서울에서 외교 장관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회 정개특위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 선정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29일 2024년 선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할 위원 9명 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재윤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부영 변호사, 장선화 대전대 조교수, 정 상우 인하대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부교수, 최준 영 인하대 교수, 최현선 명지대 교수, 홍재우 인제 대 부교수로 구성됐다.

선거구획정위는 22대 총선 18개월 전인 10월 10

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 거법에 따라 선거 13개월(2023년 3월 10일) 전까 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선거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선거운동 제도 정비 등 정치 관계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